

# 여야, 민생법 합의 물꼬 텃지만... 특검·거부권 '척척산중'

### '구하라법'·'간호법' 이번달 처리키로... 22대 국회 첫 합의 실행 관심 野 '채상병 특검법' 등 7건 단독 처리... '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이견

여야가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원 후 두 달 가까이 정쟁으로 시끄러웠던 22대 국회에서의 첫 합의라는 점에서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양측 의무를 제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시도 중이다. 이달 중순 이후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첫 합의의 처리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이처럼 일부 법안의 합의 처리에 나선 것은 '타임프(타른-위메프) 사태'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만 쫓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여야 행태로 봤을 때 극한 대치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단번에 '해빙 무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자 정국 경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가운데 언제든 타협할 수 있는 '뇌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이 여야를 포다시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태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아 더욱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고, 앞서 폐기된 두 차례의 특검법처럼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의 도들이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질 공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며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둔 것을 비롯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점쳐진다. 결국 이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는 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정쟁 대신 민생을 챙기자면서 나라한 입을 모은 '여야정 협의체' 역시 구성 단계부터 각자 이견을 노출한 채 파열음만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자체 및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자꾸 밀어붙이니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협의체를 굴러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 당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조국 "개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구성하자"

### 개혁신당 "검토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취임 인사차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나 군소 야당 6곳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이어가지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열어두고 있고, 개혁신당에도 여러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사안별로 공감대를 이뤄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도 "우리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법안 발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 재원마저도 매년 1조원 수준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0%를 지역활성화펀드 출자로, 지자체 지원 배분액이 삭감돼 지자체들이 기존·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하고 2031년까지도 규정돼 있는 한시 조항 폐지 내용을 담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를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법 당론 추진"

### 국회 최고위... "민주, 금투세 문제 토론 참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 지원 받고 있다.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고독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송석재·박수영·고동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은

거론하며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여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 기 군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